

김진애의 '이 시대 리더십'



김대중은 누구에게서 나타날까?

김대중 대통령은 놀라운 분이다. 정치 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지식인, 사상가,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거인'이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만큼 온갖 편견과 공격에 시달려 온 분도 없을 것이다. 거의 '왕따'를 당하듯 시달리셨다.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세력들, 언론으로부터의 공격도 있었다. '빨갱이'라는 프레임, '무능하다'는 프레임,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 '대통령 병'이라는 프레임, '급진적'이라는 프레임, '이 사람만은 안 된다'라는 프레임 등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붙여졌던 온갖 꼬리표들을 모두 넘어섰다. 김대중 대통령의 존재가 없었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변혁의 희망조차 살려내지 못할 뻔했다. 이것은 다만 민주 진보세력의 십년 집권에 그치지 않는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국민이 절망에 빠질 때,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떠올리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 준 것이다. 정치란 희망의 행위임을 증명했다.

나는 차기 정부가 김대중 정부 시대와 유사한 상황을 끝내 이겨내야 할 것이라 는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캐릭터를 다시 주목하고 싶다. 유권자들은 출렁이는 대선 구도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떠올리고 김대중의 장점이 누구에게서 나타날까 판단 하시기 바란다.

첫째는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이다. 탄핵 정국에 의해 조기 출발하는 차기 정부는 국정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인수 과정보도 없이 곧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한다. 공약 그대로 '준비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경험과 고민과 해량이 없이는 돌파가 불가능하다. 준비된 팀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같이 하는 세력이 얼마나 탄탄한가는 절

대적으로 중요하다.

둘째는 개혁 요구 분출의 시기에 '균형자' 역할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IMF 위기 극복'에 집중하느라 하고 싶은 정책을 맘껏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겠지만 그는 복수를 하지도 않았으며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았고 힘을 나눌 줄도 알았다. 그는 원칙에 충실했으나 유연하게 운용할 줄 알았다. 그런 균형자 역할이 다시 한 번 필요한 시기다.

셋째는 '개헌'을 절대적인 고리로 하여 새로운 체제에 대한 초석을 만드는 시기이다. 이것은 다만 권력구조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평생의 과제인 '민주주의'를 어떻게 헌법에 더 높은 차원으로 녹여 내느냐의 과제이다. 개헌 따로, 국정 따르기가 아니라 같이 가야만 하는 과제다. 민주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넷째는 남북 평화와 공생을 회복해야

할 시기이다. 무말뚨 것 없이 김대중 대통령 최고의 어젠다이자 성과는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남북 공존의 정책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흔들여 왔지만 그보다 더 나은 남북 정책은 없다. 변화하는 세계 패권 속에서, 흔들리는 동북아 구도 속에서 어떻게 남북의 공존공영을 모색하느냐? 굳건한 의지가 없이는 안 될 과제다.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다시 한 번 김대중 대통령의 역량이 필요할 때다. 이번 에 나온 대선 후보들 가운데 김대중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 '김대중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권력이나 잡는 호기로 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짊어져 온 호남인들은 다시 한 번 무거운 '선대의 짐'을 지시리라 믿는다.

<전 국회의원·도시건축가>

커피 원장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쟁 위기 속에 치르는 대선

쳤고 광장의 시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의 남한 신군부 집권 인정이었다. 항모 미드웨이와 전계는 남한 정정 불안을 틈탄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인권외교의 전도사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조차도 한반도에서의 미국 국익에 손상이 없는 한 광주의 실육을 묵인한 것이다. 이는 남한에서의 반미운동의 원인이 되고 이후 전국의 미국 정부건물에 대한 방화 점거사건들의 시발점이 된다.

37년이 지난 지금 또 하나의 미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웬만한 국가 하나의 전투력을 가졌다는 칼빈슨함이다. 김일성의 생일인 15일을 전후로 한반도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란 보도도. 만약 핵이 미사일을 쏘면 이를 바로 요격해 버릴지도 모른다.

4월 27일 북폭설이 나올기도 한다.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트럼프로부터 북 핵시설 공습을 양해해 주겠다는 루머도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부인했지만 북중 국경에 15만 명의 중국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증원 배치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는 대북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세 차례나 반복했다. 이쯤이면 전쟁 위기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나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는 전쟁 가능성에 둔갑하다. 거둬드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저절 만들어 남한에 쓰겠느냐?"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7·4 공동성명 이후 30년간 계속된 남북 공존의 관행 탓이다. 최빈국 수준인 북한이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에 대해 핵개발로 맞서는 모습을 보며 신동하게 여기는 심리도 있다. 호사자들은 북한의 호전성을 먼 옛날 수양제나 당태종의 대군에 맞서 싸운 고구려의 상무정신에 빗대며 은근히 칭송하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대박'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커다란 박을 타면 보물이 쏟아진다는, 흥부전에서 빌려 온 말 같은 데 어감이 거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올 때도 어쩐지 남북통일을 준비하면만 여기는 것 같아 마뜩잖았다. 남북 영도자로서의 철학이 안 보였. 그 표현이 최순실 레토리아였음을 알게 된 지금은 더욱 싫다. 남북통일은 분명히 한민족이 크게 도약할 세기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6년간 북한은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공포정치와 핵개발로 치달을 뿐이었다. 2014년의 통일 대박론은 결국 2016년 개성공단 무조건 폐쇄로 이어졌다. 결국 통일 대박론은

남북 공존과 평화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 붕괴론을 밀도 깊도 없이 상정하고 뻔은 말이었다.

꼭 일판을 저질러 버릴 것만 같은 트럼프, 사드 배치 이후 태도가 달라진 시진핑을 두고 우리는 지금 대선을 치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불어 닥치는 안보 위기가 또 조성된 것이다. 이번에 북풍이 아니라 선제타격론을 외치는 미풍(美風)이란 점이 다를 뿐 전쟁 위기는 똑같다. 평소 대북 온건론을 견지해 온 진보정당과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주장한 중도정당이 득표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건 한반도 정세의 주체로서 미국과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점 일 것이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단행하고 북한이 반격에 나선다면 한반도에서는 인류의 전쟁사상 가장 참혹한 대량 파괴와 살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다. 1994년 북핵 위기 초창기 때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 핵시설 공습을 막은 김영삼 대통령은 그 점에서 위대했다. 미국의 호전성을 저지하고 중국에 담당하며 문제가 김정정과 담판을 지을 배짱과 두뇌를 가진 지도자가 지금 한반도 남쪽에 필요하다.

기 고



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

청년이 사라지는 사회에 국가는 없다

김하고 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나 삶의 질은 OECD(선진국 클럽) 34 개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우리 국민은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위 속담처럼 청년들이 돈이 없어 사랑을 포기하고 결혼을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출산율이 세계 최저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간 수십 년 내 세계지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희망을 꿈꾸지 못해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연전에 서울의 소위 일부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민계를 조직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이 없으니 미리 돈을 저축해서 외국으로 떠나자는 취지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청년들에게 잔인할 만큼의 각자도생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밀어 넣고 있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친구마저 자신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스펙 쌓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생각해보자, 100명의 학생이 지원부터 함께 출발해 대학출입까지 근

20년 동안 20명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80명의 삶은 비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만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시스템이라면 나머지 80명의 청년들은 무슨 희망으로 사회를 살아가라는 것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명 중 20명만 선택되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말이다.

지난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라고 한다. 10대 대기업 창고에 약 400조 가량 30대 대기업으로 넓히면 약 800조 가량이 대기업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의 두 배 가량 되는 많은 돈들이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자리를 나눠 생긴 이익들도 저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매년 전체 국민세금의 약 20%를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출을 하고(2011년 기준) 그중 90% 가량을 대기업의 R&D (연구개발)에 지원한다. 반면, 선진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절반인 10%의 세금을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지원하고 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금이 투여된다.

선진유럽국가에 비해 두 배의 지원과

혜택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100대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4%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대기업에 편중해서 집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기업 역시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라는 당초 국민세금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처지가 더 큰 문제이다. 보다 못한 정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투자 및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환류체제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고 실패했다. 그만큼 대기업의 헬 포는 국가권력을 넘어서고 있다. 헬 조선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청년들의 미래를 담보로 대기업들의 탐욕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정 묻고 싶다. 청년이 사라진 자리에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 헬 조선에 갇힌 청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미 70년 전 유럽의 선진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정치권과 노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극복해 왔다.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청년이 사라진 사회에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社 說

끝내 못 맞춘 마지막 퍼즐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특별감찰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충실) 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심사)을 한 뒤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룰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뒤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정 농단 사태로 대통령까지 파면되고 구속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할 주요 책임자가 활발하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선 후보들까지 나서서 '사법정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의 검찰 내부 인사들이 연루됐기 때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은 '정순희 문건' 사건 당시에도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은 놔 둔 채 '문건 유출' 사건으로 관련 경찰관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우 전 수석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구속을 피했다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봐 주기' 논란이 이는 것이다. 이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것은 검찰 수사의 실패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이 은폐·조작한 사건은 한둘이 아니며 대부분 권력과 연결돼 있었다. 검찰 개혁이 더욱 절실해졌다.

돈벌이에만 급급 누굴 위한 수협은행인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수협)이 기업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업인 우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받아 25건의 위협·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협은행이 말로는 어업인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금리로 어민들의 등골을 빼앗다는 얘기가.

감사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에서는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 주면서도 어업인에게는 평균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상품을 봐도 전체 70개 상품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특히 2011년 이후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27개였지만, 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설된 대출상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협은 농협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가운데 하나다.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해 목돈이 필요한 어업인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기업인에게만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금리로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작 목돈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어업인들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전체 대출 상품 70개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고작 3개뿐이라면 이름만 수협이지 일반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다.

수협은 저금리라도 기존 금리 인하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인하는 한편 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같은 수협의 돈벌이 작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가수 냇 킹 콜(Nat King Cole)과 딸 나탈리 콜(Natalie Cole)이 함께 부른 '언포게터블'('Unforgettable')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1965년 세상을 떠난 냇 킹 콜이 이 노래를 처음 발표한 건 지난 1951년이다. 이후 40년이 지난 1991년, 나탈리 콜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입힌 듀엣곡을 발표했다. 앨범은 1400만 장이 넘게 팔렸고 그해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노래'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악물중독에 빠져 휘청거렸던 그녀는 이 앨범을 계기로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운 이 만나는 법

지난 1일부터는 고(故) 신해철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그에게 '미왕'이 라는 호칭을 안겼던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다시 듣기 서비스(무료)를 통해서다. '고스트 스테이션'은 SBS와 벅스 홈페이지, 팟캐스트 앱 '팟미'에서 청취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 7권의 방송이 업데이트된다.

오랜만에 들어 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거침없지만 유쾌한 입담, 그가 선곡해 주는 노래를 듣다 보니 그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전혀 실감 나지 않는다. 삭막한 세상, 그리운 이를 동료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다. 무엇보다 '조근조근' 이어 가는 그의 특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고인의 고향 대구에서는 홀로그램 콘서트 '청춘, 그 빛나는 김광석'(무료)이 열리고 있다. 제작을 맡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실제 콘서트 영상을 분석하고 대역 배우가 크로마키 촬영을 한 뒤 CG로 만든 얼굴을 합성했다. 소극장 테마파크 분도에서 목·금·토요일에 열리는 공연에선 '이등병의 편지', '서른 즈음에',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등 3곡을 들을 수 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7-9500)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